

전직 국회의장 4명, 국회의원 161명 포함 당원지지자 90여만 명 참여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 서울중앙지법에 전달

- 온오프라인 탄원 서명운동에 전국각지의 당원·지지자, 국회의원 161명 등 약 90여만 명 참여... 전직 국회의장들도 동참
- “국민들 입게 될 피해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 구속되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탄원서에는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들의 탄원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인 탄원서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탄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다.

약 4일간 진행된 탄원 운동에는 네 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민주당 당직자 175명, 민주당 보좌진 428명, 당이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5,677명, 시·도 당별 탄원서 6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탄원서 381,675명(온라인 376,636명 / 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4,117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전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